

취학직전 유치원교육, 무상·보통교육 돼야

여90.12.21

올바른 유아교육을 위한 1차 토론회서 발표

올바른 유아교육의 방향정립을 위한 1차 토론회가 지난 8일 서대문 선교교육원에서 열렸다.

‘유아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모임’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실태점검에 이어 사·공립유치원 현장 보고, 유아교육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사립유치원 현장보고에 나선 유치원교사 신명실 씨는 “유치원의 역사는 70년대 중반까지 사립유치원에 의존했으나 부유한 상류층 자녀를 대상으로 흘러왔다는 한계성을 지녀 왔음”을 지적했다. 유아교육 기관이 공교육기관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54.9%)이나 단체에 의해 빈약한 재정 상태에서 소규모로 운영되어 왔고 유아교육 정책도 체계적인 기초연구 조사의 절차없이 즉흥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해 질적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양적으로만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전남 공립병설 유치원 교사인 박미경 씨는 공립병설 유치원의 현장실태에 대해 발표. “1980년에 40개에 불과하던 공립병설유치원이 87년에는 5천8백31개로 양적으로는 대폭 팽창됐으나 일관된 정책과 제도의 부재,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문제를 외면한 채 진행돼 내용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고 전제한 후 몇 가지 예를 소개했다. 첫째는, 공립병설유치원이 대개 농촌에 자리하고 있는 데 비해 유치원교사들은 대학에서 각종 서구식 유아프로그램에 익숙해 있고, 문교부에서 배포한 ‘유아교육지도 자료집’도 내용상으로는 편제상 농촌지역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는 것. 따라서 박 씨는 각 기관별, 지역별, 계층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국민학교의 유휴 교실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데 따라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 또 농촌사회 모순의 심화로 이농현상이 많아지고 부모들의 요구로 학원이나 사립유치원에 서의 문자지도 등이 원인이 되어 원아가 급격히 감소돼 공립유치원은 존폐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대 유아교육과 임재택 교수는 유아교육 개선을 위해 몇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유아교육은 아동의 보호, 교육받을 권리와 어머니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유아교육의 기회는 유아의 성, 연령, 장애 유무, 거주지역, 부모의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특히 저소득 계층과 취업모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하고 ▲국가는 유아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취학직전 1년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보통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